

학부모들의 한숨 “코로나에 사교육비 부담 가중”

초중고생 공교육 원격수업에 유명 온라인 강좌·과외 증가 학습격차 걱정 속 교육바우처 지급 등 개선책 마련 목소리

‘코로나19’ 사태로 공교육 현장에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방학을 맞아 학습 부진을 우려한 학부모들이 교외의 유명 온라인 강좌나 과외 등을 택하면서 평상시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한 학생 중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학습격차가 걱정되는 경우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내 집단감염 우려로 학교교육이 대폭 축소되면서 사교육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부족한 공교육에서 발생한 자녀의 학습손실을 학부모가 사교육으로 메워야 할 필요성이 생긴 탓이다. 일부 학부모는 학

교가 원격수업을 진행할 때, 학교 일과에 맞춰 오전 8시부터 자택에서 자녀 개인 과외를 시킨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교육 부담 가중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교육개발원 ‘2020 교육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대다수는 사교육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했다. ‘초·중·고생이 받는 사교육이 최근 2~3년 내 어떻게 변했느냐’는 질문에 42.8%가 ‘심화됐다’고 답했다. ‘줄었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했으며, ‘변화 없다’는 응답이 51.8%였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2만9000원으로 전년(39만9000원)보다 7.5%(3만원) 증가했다.

교육계에서는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사교육비 증가가 이어질 것

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등교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돼 계속 사교육 의존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나머지 학생들은 밀집도를 준수하며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학습 부진 등을 우려한 학부모들 사이에선 사교육에 의존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 남구에 사는 초등생 학부모 A씨는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키려고 영어·수학 학원을 보내며 새학기를 준비 중”이라며 “등교 수업이 많이 줄어들어 학교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에 대비해 학부모끼리 학원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좋은 곳이 있으면 서로 추천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코로나19로 지난 한 해 아이들이 너무 많이 놀았다”며 “고등학생이면 학생부종합이나 수능 중 더 유리한 것을 찾아 준비해야 할 텐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 주에 몇 번

정도만 등교할 것 같아서 걱정돼 개인과외를 불러줬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육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사교육 의존성을 막기 힘들다면, 거꾸로 학습격차를 해소하는데 사교육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졌는지를 따지기도 기초학력 향상 등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학생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교육을 못 하게 할 것이 아니라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학습격차가 걱정되는 학생들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지역아동센터 등에 불러 학습을 도와주거나 ‘교육바우처’를 지급하고 학원을 이용해 온라인 학습약자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만 하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우병우 항소심 감형 징역 4년→1년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이날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이 안중범 전 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는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중범·최서원·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비위·비위를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의 비위 정보 등을 국정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추경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2가지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우 전 수석이 과거 구속돼 구치소에서 약 1년 동안 구금됐던 만큼 재구속하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선고가 끝난 뒤 “수사 계기가 됐던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왔다”며 일부 유죄가 유지된 부분과 관련,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제 무죄를 위해서 싸울 예정”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병간호 해주다 말다툼 남편이 전 부인 살해 항소심도 징역 8년 선고

같은 병원에 입원해 병간호하던 전 부인을 살해한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나모(8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나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정황과 사정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씨는 2019년 9월 5일 오후 3시 47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전 부인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십 년 전 부인과 이혼했으나 허리를 다치자 자녀들의 권유로 전 부인과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나씨는 치료를 받으며 피해를 보살피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전 부인과 다투다가 “왜 나한테 잘해주는냐. 아파트를 팔아 돈을 빼앗으려는 것이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병원에 입원해 전 부인의 간병을 도운 점,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나씨의 경우 양형 기준 권고형은 징역 5~30년이나 감경 요소를 적용한 권고형 범위는 징역 10~16년이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설맞이 적십자 사랑나눔 4일 오전 광주시 임동 적십자광주봉사회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원들이 저소득층 가정에 나눠줄 떡국과 계란, 마스크 등 생필품을 상자에 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지검, 검사가 모든 사건 직접 면담·조사한다

서류 위주 처분 따른 불신 해소

광주지검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건을 직접 면담·조사하기로 했다. 형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사가 경찰 서류만 보고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발생하는가 하면, 검찰 처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지검은 모든 사건을 검사가 직접 면담·조사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건 관계인들에

게 의견 개진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통상 형사 사건 처리 시 송치 후 검찰에서 별도로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처분하는 사례가 많았다.

광주지검은 검사뿐 아니라 검사직무대리의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서도 양형 판단을 위해 사건관계인을 직접 면담·조사하기로 했다.

면담·조사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술증거는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필요 시 영상녹화 및 음성녹음을 활용할 것

는 방침이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소환 대신 화상 또는 전화 녹음 방식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이 직접 검사에게 진술할 기회를 보장, 검찰의 사건 처분 결과 및 과정에 대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개발 철회 환영” 광주·전남 환경·시민단체

무등산 신앙개울 신축 반대 시민연대는 4일 “무등산 신앙파크호텔 부지에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의 철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전남지역 20여 단체와 정당이 참여한 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 “2019년 시작된 무등산 신앙파크호텔 개발 논란이 사업계획 철회로 일단락됐으나 난개발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광주시와 시의회는 무등산 자락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제도 정비, 조례 개정 등을 이어가야 한다”며 “신양파크호텔 부지 공유화 논의는 투명하게 열린 수렴 절차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80세대 규모 연립주택을 짓는 사업은 추진 단계에서 중단됐으며 협의회는 공유화 방안을 마련해 5일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